

공적자금 투입 어떻게 볼 것인가

김상조

한성대 경산학부 교수

공적자금,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공적자금 추가조성 여부를 놓고 언론, 여야 정치권, 정부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 발단이 된 금융 구조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조성에 대한 국회동의는 물론 기존 사용분에 대한 책임추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추가조성 없이 이미 조성된 공적자금을 회전 사용함으로써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자금은 협의의 것, 즉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금융 구조조정용 채권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지급보증한 것을 의미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제공자(독점재벌과 수구정치권)가 이에 따른 손실 전부를 자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자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귀책사유도 없는 국민이 그 손실의 대부분을 뒤집어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적자금이다.

한다. 1998년 5월 정부는 국회동의를 거쳐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으며, 1999년 말까지 전액 사용하였다. 그런데 실제 공적자금 투입액은 64조원에 그치지 않는다. 2000년 4월 말 현재 18조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그 중 12.1조원을 재사용하였다.

협회의 공적자금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했던 만큼 조성액(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64조원의 원금에 이자까지 합친 금액)과 최종 회수액(불확정)의 차이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메워야 한다. 즉, 그 차액은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되며, 특히 국가채무로 누적될 경우에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원인제공자의 손실부담 책임

경제위기를 불러온 원인제공자(독점재벌과 수구정치권)가 이에 따른 손실 전부를 자체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자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귀책사유도 없는 국민이 그 손실의 대부분을 뒤집어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적자금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전형이다. 따라서 공적자금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 즉 원인제공자가 최대한의 손실부담 책임을 지야 한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것이 공적자금과 관련된 첫 번째 논점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한편,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은 협회의 공적자금만이 아니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따라서 국민적 감시가 작동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인 유사(類似) 공적자금(광의의 공적자금-편집자)이 도처에 널려 있다. 우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특수은행출자, 차관자

금, 금융기관차입금 등의 명목으로 25.8조원의 자금이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 투입되었다. 또한 대우그룹 부도로 촉발된 투신사 환매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조성한 30조원의 채권안정 기금 역시 은행의 부실채권 누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지막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사상 유례없는 한자리 수 금리정책은 주식시장의 거품을 조장하고 물가상승 압력을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사 공적자금의 철저한 통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적자금 규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이 어설프게 강제되면, 협의의 공적자금 대신 유사 공적자금이 창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유사 공적자금은 원인제공자와 정책결정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배해는 협의의 공적자금보다 훨씬 심각하다. 따라서 유사 공적자금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이것이 공적자금과 관련된 두 번째 논점이다. 그러나 독점재벌과 정책당국은 유사 공적자금의 달콤한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다른 한편, 협의의 공적자금이든 유사 공적자금이든 간에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차피 경제위기는 그 손실의 사회화를 요구한다. 경제위기는 시장기능의 왜곡·정지를 의미하는 것인 만큼 이를 수습하기 위한 비용의 상당부분을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기득권세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대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자금은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에서

공적자금은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에서 나아가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조성·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경제의 현황 파악 및 미래전망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조성·투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민경제의 현황 파악 및 미래전망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 래야 공적자금의 조성규모 및 투입시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적자금과 관련된 세 번째 논점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에는 '제2의 경제위기론'과 '실물경제 건전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97년 상황과 대단히 비슷하다.

공적자금과 노동대중

앞서 제기한 공적자금과 관련된 논점들은 그 자체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을 안고 있다. 최소화해야 되면서 동시에 증분해야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면서 동시에 적기에 집행해야 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하면서 동시에 책임의 일부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민'이라는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 '노동대중'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서게 되면 그 모순은 더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 노동자가 아닌 국민(또는 자기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고, 노동대중 내부에도 업종별·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노조유무별·성별에 따라 천차만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우자동차 문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 = 공기업화' 문제이

다. 물론 해외매각을 하든 공기업화를 하든 기존의 부실을 청산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에 전가되는 것이고, 그 상당부분은 이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은행의 손실에 반영되었지만, 공기업화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추가 자금지원 부담까지 은행이 짊어져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은행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 잠재부실을 모두 반영한 실질적인 BIS비율을 추계해보면 대부분의 은행이 8%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우차의 공기업화는 은행에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노동자의 고용조정과 은행주주의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반 유지라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극히 불확실한 이익을 위해 기꺼이 개인 회생을 김수할 은행노동자와 은행주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우차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추가 소요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주장도 이들의 회생정신을 제고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은행 역시 대우차 못지 않은 부실상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상급단체 역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모순이다. 또한 이 모순을 개별 노동자 내지는 단사 노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위기 하의 구조조정 국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산별조직, 나아가 전국조직이다. 이들 상급조직은 사회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호 충돌할 수밖에 없는 노동대중 내부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대중조직으로서 노조는 연대의 원리를 생명으로 하지만, 이해관계의 충돌을 전제하지 않는 연대는 허튼 구호에 불과하다. 예컨대, 대우차의 해외매각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몇 달 힘들게 입단투하여 얻어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하루의
주가·금리·환율·물가 변동에 의해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좌우하는 것이 이른바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는
공적자금 조성 규모 및 방법에 관한 논쟁이다.

은 한국노총 금융노련과 무엇을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공적자금의 수혜자가 되고자 하는 노동자는 공
적자금의 피해자가 되는 노동자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연대의 원리이다.

둘째, 노동자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민적 요구도 동시에 고려하여
야 한다. 이것은 노동대중의 계급성을 희석시키자는 말이 아니다.
노동자의 고용·임금·근로조건은 좁은 의미의 노동자적 요구만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달 힘들게 입단투하여 얻어
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하루의 주가·금리·환율·물가 변동에
의해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현실이며, 그 현실을 좌우하는 것
이 이른바 국민적 요구라는 명분 하에 진행되는 공적자금 조성 규
모 및 방법에 관한 논쟁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
최근 보수언론이 유포하고 있는 '제2의 경제위기론'은 노동대중에
대한 공격의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공적자금 추가조
성 불가피론'은 부실책임자들의 면피를 위한 방패막이인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다. 경제위기의 재발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재발하면 노동대중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노동대중은 공적자금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다만
노동대중과 국민 사이에, 그리고 노동대중 내부에 존재하는 이해관
계의 충돌을 투명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것은
노조 상급조직이 주체적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